

출판계 긴급 지원금 수혈, 혈관이 막혔다

무너지는 지식문화산업 살릴 실질적인 도움 못돼...대출금리, 상환조건 등 조정되길

지난 3월 정부는 위기에 직면한 출판계를 돕기 위해 5백억원을 긴급 수혈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예진흥기금에서 조성하는 2백억원은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정보·전산화사업에, 재경부에서 조성하는 3백억원은 양서출판지원사업에 쓰도록 했다(본지 233·236·240호 출판계 소식 참조). 그러나 9월 18일 현재까지 출판계에 수혈된 자금은 75억원. 긴급자금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지경이다. 출판유통업체와 출판사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혈관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대출 11월까지 집행돼야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사업에 150억원, 정보·전산화 사업에 50억원이 배정된 가운데 지금까지 대출된 것은 한국출판유통(이사장 허창성)과 출판협동조합(이사장 박기봉)에 각 20억원씩이 고작이다. 자금지원이 늦어진 까닭은 담보조건에 문제가 부딪혔기 때문이다. 허이사장은 "은행측이 3백억원 대의 담보물건을 요구했다. 주식이나 어음은 담보로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은행측의 입장은 확고하다. 자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일은행 하안동 지점 관계자는 "대출을 받기 위한 우선조건은 담보에 있다. 더욱 문예진흥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를 확실하게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현재 나머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일은행 동소문동지점 관계자는 "본점 감정 전문가를 파견해 심사하겠지만 어느 정도 대출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자금대출은 11월까지 집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총리실 관계자가 두 업체를 다녀갔다. 그러나 정책입안 확인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이 업체의 견해다. 확실한 담보물건이 있거나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없으면 자금대출이 순조롭게 집행될 것 같지 않다.

지원을 받아도 문제는 남는다. 한국출판유통이 받은 20억원의 대출 이자는 6%. 일반적인 출판유통 이익분을 초과하는 것이다.

자금을 대출받아도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허이사장은 "정부가 출판계를 살릴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신용대출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망한다.

정보·전산화사업에 쓰일 50억원은 한국 문예진흥원과 (재)한국출판금고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지만 아직 지원 대상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자금 역시 많은 난관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서출판 지원금 대출조건 까다로워

양서출판에 쓰일 3백억원 중에 지금까지 대출된 금액은 35억원. 출판인 대다수는 바로 이 자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명목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자금이지만 조건은 일반대출 자금과 다를 것이 없다. 이는 자금운용을 맡고 있는 은행측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은행 본점 여신부 김계준대리는 "이 자금은 국민은행 자체에서 조성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로부터 자금조성 지원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긴급자금 또는 정책자금과는 별개라는 얘기다.

정부의 긴급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전해졌을 때 많은 출판인이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과도한 담보와 16.5% 대의 이자가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망감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을 때부터 나타났다. 까다로운 대출조건을 이미 알고 있는 출판사들이 신청서 제출을 꺼려 출협은 2차에 걸쳐 접수공고를 내야 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출판사 중에 단 한곳을 제외하고 10억원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출판사 가운데 아직 대출 신청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출판사 중에서도 상당수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담보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출판 소나무 유재현 대표는 "1억원을 대출받으려 했는데 은행측에서 아파트 같은 확실한 담보만 요구해 포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10억원을 신청했던 중견 출판사의 자금담당자는 "몇번에 걸쳐 요구한 서류를 준비하느라고 골탕만 먹었다. 이게

지난 3월 위기에 직면한 출판계를 살리기 위해 5백억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발표에 출판인들은 기대가 컸다. 막상 현재까지 수혈된 지원금은 75억원. 긴급자금이라는 명목이 무색할 지경이다.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혈관을 막고 있어 긴급지원금은 많은 출판사들에게 '그림의 떡'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출판유통구조 현대화사업에도 지원금이 배정돼 있으나, 은행의 담보물 요구에 대출받기가 까다롭기만 하다. 사진은 한국출판협동조합.



무슨 긴급 지원 자금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원을 받은 출판사 또한 불만이 많다. 현재 적용되는 대출 이자율은 16~15.5% 정도. 이는 일반적인 출판사 이윤을 두 세배 초과하는 것이다. 2억원을 대출받으려던 삼과꿈 김용원 대표는 "정부에서 출판계를 생각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이자 15.5%는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서도 신청서 제출을 아예 포기했다는 한 중견 출판사 대표는 "담보가 있다면 무엇이든 자금을 대출받겠는가. 그동안 거래해온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이자도 그보다 1~2% 싸다"고 밝혔다. 결국 양서출판지원금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인 긴급지원 될 수 있길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담보능력을 충분히 갖춘 튼실한 업체에게 굳이 지원 대출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또한 "지식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위기에 처한 출판업계에 5백억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자금의 대출조건은 출판계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 출판사의 한 대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최소한의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다.

말로만 긴급자금이지 현실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색내기에 그쳐버렸다"고 질타했다.

정부에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던 만큼 출판계는 과도한 담보조건을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국민은행 자금대출 담당자는 "출판사들이 어렵다는 것은 짐작했고, 신청서를 받아보니 명확해졌다. 그런만큼 대출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출판사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은 어쩔든 지원금을 마련토록 한 처음의 방침과 명백히 상반되는 것이다.

이자율과 상환조건 또한 완화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은 정부의 정책자금 이자율 12~13%보다 높다. 출판인은 최소한 정부의 정책자금(이자 12%대), 최대한 중소기업진흥기금(7~8.5%) 정도의 이자율 적용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상환조건도 그렇다. 현재 양서출판지원금의 상환기한은 1년.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상환조건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다.

정부의 긴급자금은 오히려 출판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림의 떡'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무너지고 있는 지식문화산업을 조금이라도 지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긴급자금'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것이 출판인들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 오완진 기자